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6. 11. 28(월) 14:00~17:00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 대강당



> 주최·주관 :  이만희·김현권·황주홍 국회의원,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대학

[토론회 자료집]

농업인력 육성정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 시 : 2016년 11월 28일 (월)

장 소 : 사학연금 서울회관 2층 대강당

주최 / 주관 : 이만희·김현권·황주홍 국회의원,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한국농어민신문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대학

환영사



중앙회장 김진필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여해 주신 회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동 주최를 수락해 주신 국회 농식품위의 이만희, 김현권, 황주홍 의원님,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님, 한국농어촌공사 정승 사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1981년부터 지금까지 젊고 능력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이 14만명 넘게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이제 전체 농가 인구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후계농업경영인들은 농업·농촌을 지키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영농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14만 후계농업경영인을 회원으로 하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대 농업인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한농연 회원 출신 농·축협 조합장과 지방의원 및 기초단체장, 국회의원은 물론 제55대 박홍수 농림부장관까지 배출함으로써 농업·농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이처럼 달라진 위상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한농연 회원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의 금리는 물론, 상환기간, 지원 상한액을 보더라도 타 정책사업에 비해 불리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일원화·체계화되지 못한 현행 농업인력 육성 정책으로 인해 오히려 한농연 회원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현실을 타개하고자 한농연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주제발표를 통해 소개될 유럽연합, 일본, 미국 등의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여, 한농연 회원들이 제대로 대접받고 신명나게 농사지을 수 있게끔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나아가 자영농고, 한국농수산대학 등의 졸업생, 청년 4-H 회원을 포함한 젊고 능력 있는 인재들이 확고한 신념과 비전을 갖고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주제발표자는 물론 패널 여러분께서는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발전 방안을 진지하게 토론하시어, 생산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농업·농촌을 책임질 핵심 주역이신 청중으로 계신 회원 동지 및 농고·농대생 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토론회를 통해 14만 후계농업경영인의 입장에서 일원화·체계화되고 보다 발전된 농업인력 육성 정책이 마련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김진필

축 사



국회의장 정 세 균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장 정세균입니다.

<농업인력 육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신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진필 회장님과 평소 우리 농업과 농촌정책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희·김현권·황주홍 의원님 그리고 300만 농업인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는 한국농어민신문 관계자 여러분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은 인류가 수렵과 채취 위주의 동물적 생활방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신석기말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인류가 식량을 자급하는 행위, 즉 농업을 시작함으로써 비로소 동물과 구분되는 인간사회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농업은 인류의 근본이 되는 산업이며, 인류를 존속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산업이고, 이 후 인류가 존속하는 한 끝까지 함께해야 할 산업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농업은 그 경제적 효율성이나 산업적 가치 이전에 국가나 사회를 존속시키기 위한 기간산업으로 그에 따른 합당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함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간의 우리 농정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기에는 늘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경제발전의 효율성이라는 명분에 가려 국가 정책에서 늘 후순위로 밀리는 희생을 강요당해야 했습니다. 21세기 들어 다발적인 FTA 체결로 우리 농업이 또 다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현실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지켜줄 13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모임인 한농연은 그동안 우리 농업의 지킴이이자 새로운 대안세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전문 후계농업경영인 배출은 물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우리 농업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신 한농연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역시 그러한 노력의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간 정부가 펼쳐온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후계농업인 육성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번 토론회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국회는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잘 살피 우리 농업이 지속가능한 생명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주신 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편집국장님을 비롯한 발표자와 각계 패널 여러분의 혜안이 빛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치열하고 열린 토론을 통해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 정세균

축 사



박 지 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입니다.

오늘 ‘농업인력 육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련하여 주신 이만희, 김현권, 황주홍 의원님과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님, 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 대표이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제발표를 해주시는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과 변상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님, 토론에 참여하여 주시는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과 농업이 어렵습니다. 농촌에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대부분으로 우리농업의 지속가능 전망이 어둡습니다. 귀농, 귀촌이 늘고 있다지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서민경제가 다 어렵지만, 특히 우리 농민의 사정은 심각합니다. 농민 10가구 중 7가구는 수입이 1년에 1천만원도 안 된다고 합니다. 농기계 임대비, 종자비 등 각종 비용을 제하고 나면 결국 마이너스입니다.

1981년부터 시작된 농어민 후계자 육성정책을 통해 13만 여명의 젊은 농업경영주를 양성, 정착시켜 왔으나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전략적 목표없이 여러 가지 정책을 나열식으로 내놓고 있어 혼란만 가중시키고 뚜렷한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이 모이신 오늘 토론회에서 젊고 능력있는 농업경영주를 육

성, 정착시킬 수 있는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안이 도출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중요한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신 분들과 참여하여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박지원

축 사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국 13만 농업경영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입니다.

「농업인력 육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누구보다 한국 농업 발전에 앞장서 온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은 오늘날 제품 가공과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산업으로, 생명·나노 기술과 같은 첨단 과학이 융합된 미래 산업으로의 도약을 맞고 있습니다.

과거 개간지에서 경작을 했던 우리 농업이 이제는 혁신적인 농·식품 기술 개발에 성공하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세계 상위권의 농·식품 수출국 반열에 오를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젊은 후계 농업인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농촌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차세대 농업 산업을 견인할 기회조차 잃게 될까 우려됩니다.

농촌을 이해하고 책임질 수 있는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인을 육성해야 합니다. 농업생산뿐 아니라 농업 산업에까지 이를 수 있는 젊은 농촌 인재를 양성하고

정착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농업과 농촌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많은 개선책이 도출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농업인력 육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어려운 우리 농촌이 활로를 찾고 풍요로운 농촌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정진석

축 사



국회의원 우 상 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입니다.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농업인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지난 1981년 도입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이 올해로 도입 35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모두 14만명이 넘는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양성돼, 우리 농촌과 농업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올해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의 42%가 39세 미만일 정도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은 젊은 층의 농촌 유입 활성화의 창구 역할 또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농촌은 동시다발적인 양자 및 다자무역협정 체결과 그로 인한 농산물 시장개방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젊은 귀농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도시와 농촌의 소득 양극화는 극심한 상태이며, 농촌 지역 황폐화 역시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로벌 농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촌이 직면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농업 인력 육성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뚜렷한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중구난방식으로 쏟아지는 각종 정책들이 오히려 혼란을 키우는 양상입니다.

따라서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농업 인력 육성 정책을 일원화·체계화하고 자영농

고·한농대·한국농업연수원 등 농업인 대상 교육 기관을 강화하는 등의 종합적 정책 마련을 서둘러야 합니다. 단순히 부족한 농업노동력을 확보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농업과 농촌의 미래를 책임질 진정한 리더를 훈련·양성시키는 쪽으로 농업인 육성정책의 방점이 찍혀야 합니다. 오늘 토론회 개최의 의의가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 개최를 준비해주신 김현권 의원, 이만희 의원, 황주홍 의원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내·외빈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계기로, 농업과 농촌을 책임지는 있는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사명감과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더한층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축 사

국회의원 김 영 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영춘입니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시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와 소속 회원 분들과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주신 황주홍 의원님, 이만희 의원님, 김현권의원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진필 회장님, 한국농어민신문 윤주이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의 농촌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산업화의 진전으로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현상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하고자 농업인후계자, 전업농 육성 및 귀농·귀촌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 농업이 직면한 여러 난관을 해결하기에는 개선할 부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의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트럼프 정부가 경제 및 정치적 국제 분쟁 시 농축수산물을 전략물자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급률 향상을 위해 지난해와 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했지만 식량자급률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이 목표치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의 주제인 ‘농업인력 육성’은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고 지속가능한 농

업육성을 위해 결코 간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산업과는 달리 농업은 한번 무너지면 다시 제자리를 찾기가 어렵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입을 통한 식량 조달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반문도 있겠으나 수입의존도의 증가는 곧 식량안보의 위험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1981년 농어민후계자로 시작한 농업인후계자육성사업이 도입 된지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토론회가 정예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또한 쌀 생산조정제도의 도입을 시작으로 농업·농촌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김 영 춘

인 사 말

국회의원 황 주 홍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안녕하십니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주홍 국회의원입니다.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의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이만희 의원님, 김현권 의원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진필 회장님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1981년부터 지속돼 온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을 통하여 지금까지 14만명의 젊은 농업경영주가 성공적으로 정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40대 이하의 농업경영주 감소 추세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었음은 물론, 조수입 1억원 이상 농가 비율 증대, 농업소득 증가, 영농 규모화 확대 등과 같은 긍정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아가 후계농업경영인들은 농업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업 및 6차산업 분야 등으로 활발히 진출하고 있으며, 농축협 조합장이나 지방의원·자치단체장 등으로 활발히 진출하여 지역농업과 농정을 책임지는 중추 세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농식품부의 연구 용역 결과를 보더라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의 비용 편익은 1.18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완전 개방 시대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고 책임져야 할 젊고 능력 있는 농업경

영주를 키우고 정착시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국가적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적극 나서서 지원 예산을 늘려야 함은 물론, 농업인력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나가야 함은 당연합니다. 저를 포함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 또한, 미래 우리 농업·농촌을 책임질 훌륭한 인재들이 더 많이 정착할 수 있게끔 제도 개선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청년은 미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특히 자영농고나 한국농수산대학 등에 재학중인 예비 농업인은 물론, 청년 후계농업경영인들에게 보다 큰 힘을 줄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청년 농업인 여러분께서도 더욱 힘을 내고 분발하셔서 우리 농업·농촌을 떠받치는 든든한 기둥, 뿌리가 되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황주홍**

인 사 말

국회의원(영천·청도) 이 만 희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이만희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좀 더 나은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토론회를 위해 함께 힘써주신 김현권 국회의원님, 황주홍 국회의원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김진필 회장님, 한국농어민신문 윤주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촌은 지금 수많은 위기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FTA 이행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공동화 현상 등의 농업의 대내외적 여건들은 갈수록 어려워져만 가고 있고, 이에 더해 기후변화와 예상치 못한 현안들의 발생은 우리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자연스럽게 농업 인력의 부족을 야기시켜 농촌 내 지역사회의 유지와 지역 내 영농활동 등에 많은 제한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식량자급률 달성을 통한 국가식량 안보라는 중요한 사명의 수행에 있어서도 큰 타격이 있을 것은 자명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의 식량 주권 보호와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이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농업인력 육성정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향후 중장기적 비전을 수립해 나가기 위해서는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주를 육성·정착시켜, 이들이 현장을 대변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핵심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모인 이 자리에서 폭넓고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다양한 정책 대안들이 모색되어 “더욱 살기 좋은 농촌”, “살 맛나는 농촌”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이만희

.....
인 사 말
.....



국회의원(비례대표) 김 현 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입니다.

오늘 “농업인력 육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회에 뜻을 함께 해주신 이만희 의원님, 황주홍 의원님,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님, 윤주이 한국농어민신문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 『2015년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1995년 500만명에 육박하던 농가 인구가 2015년에는 260만 명으로 반토막 나고, 이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비중 또한 1995년 10.9%에서 2015년에는 5.0%로 급감하는 등 농촌 인구감소 문제가 극심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오랜 시간 국가산업을 지탱해 온 농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연령대별 농가인구의 경우 출생아수의 감소와 젊은 층의 이탈 등으로 50대 미만층의 감소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50대 이상층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60대 인구는 전체 대비 23.3%, 70대 이상은 27%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촌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등은 직접적으로 농업 노동인구의 감소를 불러일으키고 중국에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가치를 상실케하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등 지속가능한 농업과 농촌을 위한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늘 개최되는 “농업인력 육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젊고 유능한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정착시켜 농업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농촌 현장에 젊은 새바람을 넣어줄 대안을 고민해보는 취지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국회에 들어와서 농촌에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착하고 지원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정부와 국회, 전문가와 현장 농업인, 한국농수산대학, 자영농고 재학생 및 졸업생 등 이해 당사자 모두가 머리를 맞대어 농업 현장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성 높은 젊은 영농인력 육성·정착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건설적인 정책 대안들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에 바쁜 일정을 뒤로 하시고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말을 갈음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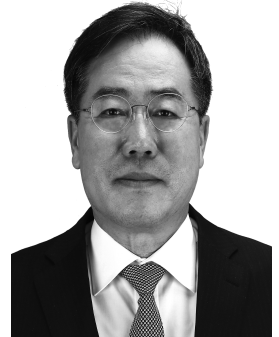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김현권

축 사

정 승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농업인력 육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한농연과 한국농어민신문 관계자,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국회의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젊은 농업인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해 농업의 6차산업화 등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을 비롯하여 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농업의 4차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주인공도 바로 젊고 유능한 농업인입니다.

농업인력의 육성은 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세계화, 기후변화, 장수사회의 도래 등 농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030세대 농지지원 정책을 통해 청년농업인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공사는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과 학계 등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우리 농업·농촌의 희망을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11.28.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계획

1. 제안 배경

- 198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후계농업경영인(구 농어민후계자) 육성정책을 통해 지금까지 13만명 이상의 기술력·경영능력이 뛰어난 젊은 농업경영주를 양성·정착시켜 왔다. 이들은 단순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업 등 관련산업 분야에 적극 진출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농·축협 조합장이나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 등으로 진출하여 지역농업·농정의 중추 세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 이처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왔음에도, 한농연의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일원화·체계화 요구에 정부는 뚜렷한 정책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기존의 전업농 육성정책, 농업마이스터 육성정책 등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정책과 어떻게 연계·발전되는 개념인지도 불명확한데다, 중앙정부·지자체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이 기존 농업인과 귀농·귀촌인간의 경합·갈등만 심화시킬 뿐 뚜렷한 정책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 정부의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 젊고 능력있는 농업경영주·지도자의 육성·발전을 지원함에 있는지 ▲ 우리나라 농업 GDP를 유지·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농업노동력(단순노동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공급을 유지·확대하기 위함인지 ▲ 농촌 지자체의 인구 감소로 인한 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책인지 불명확하다.
- 농업인력 육성 정책의 핵심은 젊고 유능한 농업경영주를 육성·정착시켜,

이들이 우리나라 농업생산·농산업 분야는 물론, 지역농업·지방농정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세력이 되게끔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세부 정책과제들은 아래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농업인력 육성 정책 일원화·체계화
 -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으로 통·폐합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및 추가지원 자금 금리 인하(0%까지), 거치·상환기간 연장(최장 30년), 자금 지원 한도 확대(3~5억원)
 - 농업인이 자녀에게 경영 승계시 지원책을 획기적으로 강화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병역특례) 유지·확대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시 읍·면 단위 농업인단체장 추천서 첨부 의무화
 - 예비 농업인 대상 교육 의무화(자영농고, 한농대, 한국농업연수원) 등
- 위의 정책 개선 과제를 폭넓게 토의하여 공론화하기 위해, 한농연은 이만희·김현권·황주홍 국회의원, 한국농어민신문과 함께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2. 토론회 개요

- 행사 개요
 - 제목 :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 일시 : 2016년 11월 28일(월) 14:00~17:00
 - 장소 :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 서울회관 대강당
 - 주최·주관 : 이만희·김현권·황주홍 국회의원,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주)한국농어민신문
 - 후원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대학
 - 참가 인원 : 한농연 회원, 농업인 및 관계자 450여명 내외
- 주제발표 1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조정실장
- 주제발표 2 : 농림축산식품부 변상문 경영인력과장

○ 패널(좌장, 지정토론자) 구성

- 좌장 : (주)한국농어민신문 정문기 편집국장
- 학계 1: 농협중앙회 미래전략부 김육곤 부장
- 학계 2: (사)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 교육계1 : 한국농수산대학 교양공동학과장 신용광 교수
- 교육계2 : 여주자영농고 이종찬 교장
- 농업계 : 한국농수산대학 총동문회(전남지사) 허동운 회장

※ 상기 안은 토론회 준비과정에서 다소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책토론회 행사 주요내용

시 간	행 사	내 용
14:00 ~ 14:30	1부 : 개회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의례 ○ 내빈소개 ○ 김진필 중앙회장 인사말 ○ 참석 국회의원 인사말 ○ 주요 내빈 축사
14:30~17:00	2부 : 본 토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장 인사 및 패널 소개, 진행 요령 안내 ○ 주제발표 ○ 휴식 및 장내 정리 ○ 전문가 패널 지정토론 ○ 청중 질의 및 토론, 패널간 추가 토론·발언 ○ 좌장 정리 발언 및 마무리

**농업인력 육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 1.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

한 민 수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



농업인력 육성 정책 발전방안 모색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민수 정책조정실장

목차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개요 및 성과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문제점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개선 방안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개요 및 성과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신규) 개요

▶ 목적

- ▶ 농업 발전을 이끌어 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 및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교육, 컨설팅, 영농자금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정예 농업인력을 육성(매년 1,700억원 자금 지원. 1,800명 이상 선정)

- ▶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지원 형태

- ▶ 창업기반 조성 비용 및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을 지원
-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 기간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 대출 금리 : 연리 2%(고정금리), 변동금리 선택 가능
- ▶ 창업 독려 및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해 신입선출 형태의 총 자금 Pool제 운용
- ▶ 2억원 이하 농신보 보증은 90%, 잔여 10%는 금융기관 자체 보증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개요 및 성과

▶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 사업 개요

▶ 목적

- ▶ 우수한 농업경영인의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 농업 전문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에 기여(매년 600억원 자금 지원. 300명 내외 선정)

▶ 근거 법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후계농업경영인의 선정 및 지원)

▶ 지원 형태

- ▶ 창업기반 조성 비용 및 농업 교육·컨설팅 비용을 지원
-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 대출 한도 : 최대 2억원 / 대출 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 대출 금리 : 연리 1%(고정금리)
- ▶ 창업 독려 및 예산집행을 제고를 위해 선임선출 형태의 총 자금 Pool제 운용
- ▶ 2억원 이하 농신보 보증은 90%, 잔여 10%는 금융기관 자체 보증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개요 및 성과

○ 연도별 육성내역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81~09	10	11	12	13	14	15
육성인원	140,289	130,070	1,559	1,500	1,564	1,849	1,861	1,886
지원금액	3,333,030	2,696,630	88,000	88,000	88,000	101,200	101,200	170,000

자료 : 농촌정책국 경영인력과

○ 분야별 육성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81~11	12	13	14	15	계	
						인원	비율(%)
합 계	133,129	1,564	1,849	1,861	1,886	140,289	100.0
수도작	25,376	274	210	339	311	26,510	18.9
원예(채소+화훼)	18,341	413	567	638	670	20,629	14.7
과 수	6,823	236	296	351	396	8,102	5.8
특 작	5,748	152	98	135	122	6,255	4.5
복 합	23,342	75	349	110	65	23,941	17.1
축 산	53,499	414	329	288	322	54,852	39.1

자료 : 농촌정책국 경영인력과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개요 및 성과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성과

- ▶ 1981년부터 지금까지 14만명 이상의 기술력과 경영 능력이 뛰어난 젊은 농업경영주를 성공적으로 양성·정착시켜 왔음
 - ▶ 후계농업경영인은 우리나라 전체 농가수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40대 이하 농업경영주 감소 추세를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음
 - ▶ 2007년 이후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률(95%), 조수입 1억원 이상 농가 비율 증가(3.9%→14.0%), 농업소득 증가 비율(87.5%), 영농 규모화 확대(64.5%) 등 긍정적 재무적 성과가 도출됨
 - ▶ 후계농업경영인들은 도전정신, 자신감, 농업발전에 대한 자존감이 증대되었으며, 일반 농업인보다 활발한 지역사회 활동(작목반, 농민단체 등)을 통해 지역 농업·농촌에 대한 기여도도 높음
 - ▶ 이 때문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비용 편익은 1.18로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성과분석, 김종호 외, 2014)
- ▶ 후계농업경영인들은 농업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유통업 등 관련산업 분야는 물론, 농축협 조합장이나 지방의원·자치단체장 등으로 진출하여 지역농업·농정의 중추 세력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음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개요 및 성과

▶ 한농연 회원 출신 조합장 현황(2015년 기준)

총계	농협	추협	산림조합
261명	207명	49명	5명

▶ 한농연 회원 출신 단체장, 지방의원 현황(2014년 기준)

총계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223명	6명	35명	182명

▶ 농업인 출신 최초였던 박홍수 제55대 농림부 장관을 포함하여 다수의 후계농업경영인 출신 인사들이 국회의원으로 진출하였음. 이들의 정책 활동을 통하여, 현장 농업인의 관점에서 농업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합리적으로 수립·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해 왔음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4만 후계농업경영인이 회원인 우리나라 최대의 농업인단체로서, 현장 중심적인 정책 대안을 선도적으로 제시하여, 정부와 국회를 통해 이를 적극 관철시켜 왔음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문제점

- ▶ 타 정책사업에 비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지원 조건이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 아래의 표와 같이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신규, 추가지원)은 타 사업보다 금리, 거치 및 상환 기간, 자금 지원 한도 등에 있어 불리한 조건임

사업명	금리	자금 한도	상환 기간
후계농업경영인 (신규, 추가지원)	2%(신규) 1%(추가지원)	2억원	3년 거치, 7년 상환(신규) 5년 거치, 10년 상환(추가)
쌀 전업농 육성	2%	9억원	최장 30년, 15년 상환
귀농·귀촌 지원	2%	3.5억원	5년 거치, 10년 상환

- ▶ 후계농 육성자금의 원리금 상환 부담도 매우 큰 상황임
 - ▶ 후계농업경영인(신규) : 원리금 226,492,909원(매년 30,6412,844원 상환)
 - ▶ 추가지원사업 : 원리금 240,843,289원(매년 22,083,228원 상환)
 - ▶ 창업 혹은 경영 확대 단계에 있는 후계농업경영인의 입장에서, 생산비 증가, 농산물값 하락, 자연재해 등의 요인까지 생각할 때 원리금 부담이 매우 큼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문제점

-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실제 창업 비용 부담도 매우 큰 상황임
 - ▶ 2010년을 기준으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 규모를 “도시근로자 평균 가계소득(약 4,3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는 규모로 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 일체와 첫 판매시점까지의 운전자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정의하여 계산한 결과와 아래와 같음(“후계농업경영인 신규창업 소요비용 분석”, 한국협동조합연구소, 2012)

품목별 구분	필요경영규모	총 창업비용
쌀	8.06ha	11억 4,319만원
사과	1.64ha	3억 1,871만원
한우	65.3두	4억 4,906만원
딸기	0.66ha	5억 5,575만원
인삼	0.58ha	3억 2,649만원
복합영농(쌀+한우)	한우 32.7두, 쌀 4.03ha	7억 3,860만원

- ▶ 위의 실제 창업 비용만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을 대출한다고 가정할 경우, 모든 품목에 있어 평생 동안(만 80세까지) 0%의 금리를 적용할지라도 원리금을 일부 상환하지 못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음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문제점

-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책이 부족한 실정임
 -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정착할 때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소득원이 없는 실정임. 과수·축산·특작의 경우 최초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뒤 최초의 수확물을 거둬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을 때까지 4~5년(인삼의 경우 한 साल 당 6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동안 생계를 꾸리고 영농자금을 증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경제활동을 하거나(현재 후계농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농외부문 취업 및 창업을 실질적으로 금지) 정부·지자체의 소득보조가 필요한 실정임
 - ▶ 농식품부는 올해부터 청년 창업농으로 선정된 자에게 창업안정자금을 1년, 1000만원 지원(총 248명)하고 있으나,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 등 ‘의무영농’을 수행하거나 완료한 자, 동일 세대 내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영농하는 자 등은 제외되고 있음.
 - ▶ 한편 귀농·귀촌 자금(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의 경우,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신축을 위한 자금을 최대 3.5억원까지(농업 창업자금 3억원, 주택 구입신축 자금 5천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나, 후계농업경영인(신규)은 이를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여차별로 작용하는 것임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문제점

- ▶ 기존 후계농업경영인과 신규 후계농업경영인간 소통(인맥 형성) 및 멘토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이 2014년부터 “후계농업경영인 멘토링 교육”을 시행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없는 구조임
 - ▶ ▶2016년 기준 멘토가 전국적으로 총 31개 품목의 54명에 불과하다(멘토 자격 기준마저 농업마이스터, 신지식농업인, WPL현장지도교수로 한정)▶ 사업예산은 2015년 7천3백만원에서 2016년 5천만원으로 감소했으며 ▶ 멘토 1인당 교육비도 시간당 5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교육 컨설팅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임
-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의 입장에서, 상시적으로 기술·경영·재무 등의 농업 전반에 대한 정보 획득은 물론 농촌 생활 전반에 대해서까지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관내 읍면·시군 내의 선배 후계농업경영인의 도움이 절실함
- ▶ 상시적·안정적인 멘토링 관계를 활용하여 관내 농업계는 물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맥과의 관계 형성 및 일상적인 소통·협력 관계를 구축·확대함으로써 농업경영의 안정 및 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미래 농산업 및 지역농업 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핵심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것임
- ▶ 그러나 현행 멘토링 교육 체제로는 이러한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음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문제점

- ▶ 후계농업경영인과 여타 농업인력 육성정책간 연계성도 부족함
 -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신규, 추가지원), 귀농·귀촌 지원 정책, 전문농육성 정책, 농업마이스터 육성 정책 등, 정부의 현행 농업인력 육성 정책간의 관계(연계성)가 모호한 실정임
- ▶ 원칙적으로는, 최초 창업 단계의 후계농업경영인이 → ▶ 자신의 “생애주기(life-cycle)”를 따라 농업경영 규모를 확대 성장시키고 → ▶ 자신의 품목(축종)은 물론 농산업 내 담당 분야(생산, 가공, 유통, 농촌관광 등을 포함한 6차산업화)에서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 ▶ 농산업(농축협, 농업법인, 기본법 협동조합 등)은 물론 ▶ 농업·농촌정책(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까지 책임질 수 있는 핵심 지도자(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원화·체계화된 농업인력 육성 정책이 수립·집행되어야 마땅함
- ▶ 이에 한농연은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농업인력 육성제도의 일원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으나, 농식품부는 개별 정책 목표 달성(영농 규모화, 농촌 인구 증대 등)만을 염두에 둔 인력 정책 기조를 전혀 개선하지 않고 있는 것임
- ▶ 개별화, 파편화된 정부의 농업인력 육성정책은, 농업인들의 품목(축종)별·영농 규모별 이해관계 및 갈등 요인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어, 핵심 농정현안의 생산적인 논의를 통한 합리적 대안 모색을 가로막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음

2.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문제점

- ▶ 기존 후계농 정책과 중복·충돌되는 귀농·귀촌지원 종합계획의 문제점
 - ▶ 농식품부가 11월 21일 발표한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은 ▶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뛰어들어 반퇴 세대와 ▶ 청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임(아래 표 참조)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주요 내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부문	주요 내용
소득	전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 귀농지원센터에서 지역 일자리 연결 - 귀농 초기 농업인 우수농가 실습 지원 연 500 → 1000명 확대
	청년층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1% 금리 귀농창업자금 우선 지원 - 청년 채용 농업 법인에 월 30만원 연수비 지원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집 수리해 제공하는 '귀농인의 집' 2017년 210곳으로 확대 - LH 30~60호 규모 귀농·귀촌 주택단지 조성 - 주택 신축·구입 자금 대출 지원 한도 5000만 → 1억원 증액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정보 제공 온라인 플랫폼 '귀농·귀촌 네비게이션' 구축 - '귀농·귀촌 지원센터' 현 50개에서 140개로 단계적 확대

- ▶ 위의 귀농·귀촌인 지원 정책들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틀 안에서도 충분히 실시할 수 있는 것인데다, 최초 창업(혹은 승계) 단계에서 영농 정착 및 생활 자금이 필요한 후계농업경영인들에게 더욱 절실히 필요한 정책임
- ▶ 그럼에도 후계농업경영인(신규, 추가지원)은 위와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귀농·귀촌인과 비교하여 심각한 여차별을 받게 되는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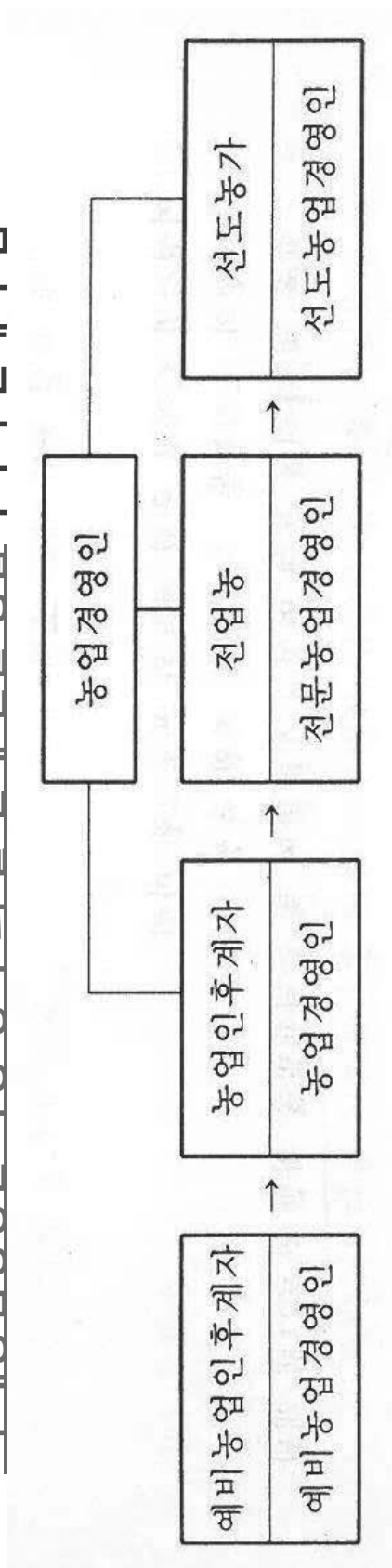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개선 방안

-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신규, 추가지원) 제도 개선
 - ▶ 지원 금리 : 0%
 - ▶ 상환 기간 : 10년 거치 20년 분할상환
 - ▶ 지원 한도 : 5억원 이상
 - ▶ 지원 대상 : 창업기반 조성, 농가주택 구입 및 신·개축용 자금 등
 - ▶ 이렇게 되면 매년 원금 상환액이 16,666,668원이 되므로(매월 1,388,889원), 농업소득이 적은 최초 진입 및 영농 확장 단계의 후계 농업경영인의 경영 안정 및 정착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게 될 것임
 - ▶ 특히 후계농업경영인 입장에서선 충분한 영농 기반(농지, 시설, 기계, 운전자금 등)을 갖출 수 있게 되어, 생산(경영) 및 생계 안정을 위한 핵심 자산을 취득할 수 있는 효과도 도모할 수 있는 것임
 - ▶ 나아가 후계농업경영인들이 더 많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으로써 헌법에 규정된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구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것임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개선 방안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을 중심으로 농업인력 육성 체계를 일원화·체계화해야 함

- ▶ 아래의 그림과 같이, “예비후계농업경영인(한농대, 천안연암대, 자영농고, 농생명고 졸업생, 4-H, 귀농·귀촌인 등) → 후계농업경영인(창업단계) → 전문농업경영인(추가지원, 전업농 단계) → 선도농업경영인(농업마이스터 단계)”으로 농업인력 육성체계를 일원화해야 함
- ▶ 이를 통해 현행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물론, “농업 마이스터 육성 정책”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틀 안에 일괄 통합하여 추진해야 함



▪ 출처 : “통일시대 우리농업의 발전 전략에 대한 농정개혁의 방향과 과제”, 1997년 한농연 대선 공약 요구사항 자료집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개선 방안

-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자금(신규, 추가지원) 제도 개선
 -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대상 “청년농업인 직불금” 제도 도입·실시
 - ▶ 지원 대상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지정된 지 5년 미만인 자
 - ▶ 지원 방식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지정후 5년차 종료시점까지 1인당 매년 1,500만원을 매월 급여 형태의 보조금으로 지원(매월 125만원씩 지급)
 - ▶ 예산 소요 : 매년 1,350억원(산출 근거 : 1,800명 × 1,500만원 × 5년)
 - ▶ (외국 사례 1) 일본의 청년취농자금 지원금 제도 : 45세 이하 청년 취농자에게 준비기간(2년)과 독립기간(5년)의 총 7년 동안 급여 형태의 보조금(연간 150만엔, 우리나라 돈 1,600만원을 지원)을 지급하고 있음
 - ▶ (외국 사례 2) 프랑스의 영농정착 지원금 제도 : 18세~40세 미만의 청년영농 정착지원 대상자에게 최소 4천유로(500만원, 평야지역, 겸업)~최대 35,900유로(4,487만원, 산악지역, 전업)을 지원하고 있음
 - ▶ (외국 사례 3) 유럽연합(EU)의 청년농업인 직불금 : 2015년부터 40세 미만으로 농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시작한 지 5년 이하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청년농업인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회원국의 의무(강제)조항으로 결정하여 시행중이며, 국가별로 배정된 직불금 총액의 2%까지 지불할 수 있음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개선 방안

- ▶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멘토링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
 - ▶ 최초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지 5년 이상으로써, 농업생산은 물론 가공, 유통 및 6차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자를 읍면별로 1인 이상 멘토로 선정(한농연 읍면동회장 이상의 인원을 우선 선정)
 - ▶ 이들 멘토들이 5년 미만 후계농업경영인 및 예비후계농업경영인(농대, 농고생, 4-H 등)을 영농 및 생활 지도를 상시적으로 하게끔 제도화해야 함
 - ▶ 멘토들에게는 월 100만원의 급여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급(연간 192억원 소요) 하고, 농업기술센터(시군청의 농정과)에서 멘토링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관리·감독토록 함
 - ▶ 특히 이들 멘토들이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선정시 영농 의지 및 미래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한 현장평가에 참여토록 하고, 선정 자격에 부합하는 신청자에게 추천서를 작성하여 시도 및 농식품부의 최종 평가시 이를 첨부·제출토록 제도화·의무화해야 함
- ▶ 이를 통해서라야, 매년 1,800명씩 선발되는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해지며, 현장 중심적인 지원 체계가 확립·운영될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농업인력 육성정책으로써의 기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임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개선 방안

▶ 농업인이 자녀에게 경영승계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함

- ▶ 한농연 회원 대상 인터뷰 및 다수의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와 함께 영농을 하면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부모로부터 영농사업의 일부를 할애받아 독립적 영농을 하거나, 부모의 영농을 돕는 보조 역할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나타나고 있음
- ▶ 농업경영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품목(축종)별로 전문화·전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향후에는 자녀 세대의 농업경영 승계를 통한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이 실질적인 농업 진입 경로로 자리잡게 될 것임
- ▶ 이들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이 부모 세대의 은퇴 혹은 사망 이후에 부모가 성장시켜 온 영농 기반을 이어받아(농업경영 승계), 1차 농업생산은 물론 가공, 유통 등 6차산업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 농업경영 승계를 고려중인 농가에게는 경영 이양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농지를 비롯하여 농업생산 기반에 대한 증여 및 상속세 부담을 완화(과세특례)하는 등의 실질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개선 방안

▶ 예비·신규 후계농업경영인 등에 대한 교육을 내실화해야 함

- ▶ 자영농고·농생명고, 한농대, 천안연암대 등 정규 교육기관은 물론, 한국농업경영인 등 민간 교육기관을 통한 예비·후계농업경영인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내실화되어야 함
- ▶ 예비·후계농업경영인 교육에 있어 품목(축종)별 농업생산 기술도 중요하지만 ▲농업경영 전반(회계, 노무, 마케팅 등)에 대한 기초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은 물론 ▲농산업 전후방산업 및 농업정책(국내 정책, 해외 농업통상협상 등)에 대한 소양을 쌓아야 함
- ▶ 나아가 ▲농축협, 농업법인, 기본법 협동조합 등의 운영 원리는 물론 ▲농업인 단체의 역할 및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 또한 충실히 교육시켜, 향후 이들이 농산업 및 농업정책을 책임질 수 있는 한국 농업의 핵심 지도자(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임
- ▶ 아울러 ▲농업·농촌의 가치와 중요성 ▲후계농업경영인의 역할 ▲한식 중심의 식생활 습관 확립 ▲정서 순화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한 도시농업 등의 내용들을 일반 초·중·고교 정규 과정(기술, 가정, 농업 교과서 등)에 반드시 반영하여 실시해야 함

3.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정책의 개선 방안

-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존속시켜야 함
 - ▶ 매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중 의무영농 기간 이후에도 연간 약 85~90%의 인원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편입되는 추세를 감안하면, 연간 약 200여명 이상의 정예인력이 농촌 내 투입됨으로써, 만성적인 핵심 농업경영주의 부족 현상을 해소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공익적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음
 - ▶ 연도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단위 : 명)

구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7개년 평균
배정인원 (현역)	175	198	113	137	206	223	246	185

※ 모종역 : 매년 15~20명 내외

- ▶ 올 상반기 병무청이 제기했다가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었던 병역특례제도(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폐지 방침이 원안대로 현실화되어 2023년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제도의 축소·폐지가 실제 이뤄진다면, 농업·농촌에 정예인력이 육성·정착할 수 있는 핵심 경로가 차단되어 농업경영주 및 농업인력 부족 현상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존치시키고, 이들이 성공적으로 유입·정착할 수 있게끔, 정부·지자체·농협·농업인단체 등의 체계적인 지원·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함

다함니가 감사

**농업인력 육성정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주제 발표 2.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업인력 육성 대책

변 상 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농업인력 육성 대책

2016. 11. 28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I 농업·농촌의 현주소

II 농업·농촌 정책방향

III 농업인력 육성 주요 정책

I

양행
양행
양행

양행·양행의 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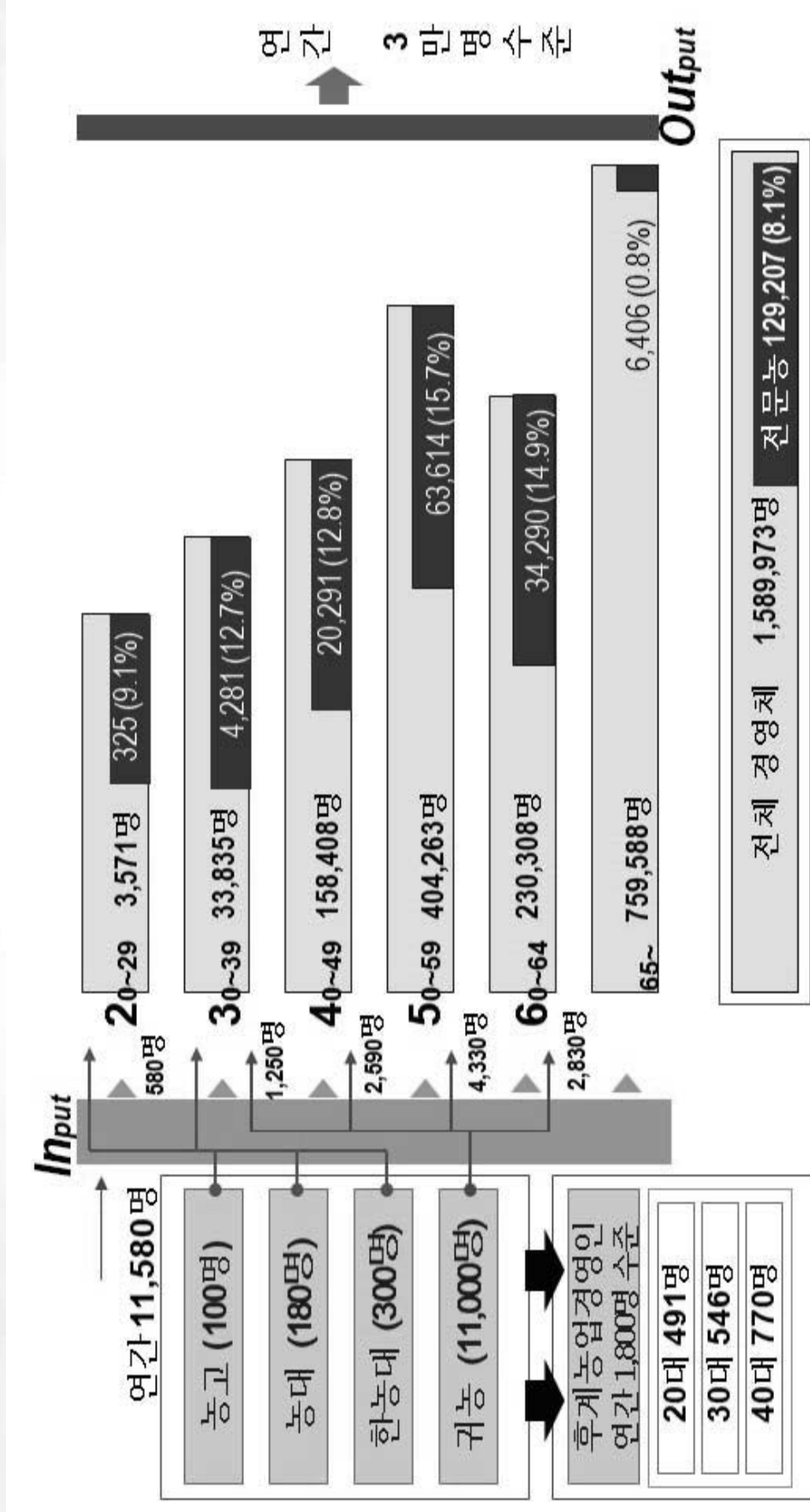
농가인구

- ✓ '15년 농가수는 109만호, 농가인구는 257만명(전체 인구 5.1%)
 - * 65세 이상 농가인구 비중 : '13) 37.3% → ('14) 39.1 → ('15) 38.4
- ✓ 농촌 인구는 전체 인구의 18.6% 수준인 939만명으로 최근 증가세로 전환
 - * 농촌인구 : '90) 11백만명 → '00) 9.4 → '10) 8.8 → '15) 9.4
- ✓ 일터 · 삶터 · 쉼터로서의 농촌의 가치가 부각되어 귀농 · 귀촌 증가
 - * 귀농·귀촌 가구수 : '10) 4,067호 → '13) 291,040 → '14) 310,115 → '15) 329,368

농가경제

- ✓ 농가소득 정체로 도농 간 소득격차 지속 (도시대비 64.5%)
 - * 농가소득(도시 대비) : '00) 23백만원(80.5%) → '14) 35(61.5) → '15) 37(64.5)
- ✓ 규모화, 고령화 등으로 경지면적 등의 농가간 양극화 심화
 - * 농가비중(3ha 이상/0.5ha 미만) : ('00) 6.2%/32.8% → ('14) 8.7/42.9
- ✓ 농식품산업 양적인 성장은 계속되고 있으나 국민경제에서의 비중은 정체
 - * 국내 총부가가치에서 농식품산업 비중 : ('00) 8.8% → ('05) 6.9 → ('10) 5.9 → ('14) 5.9

참 고: 현재 농업인력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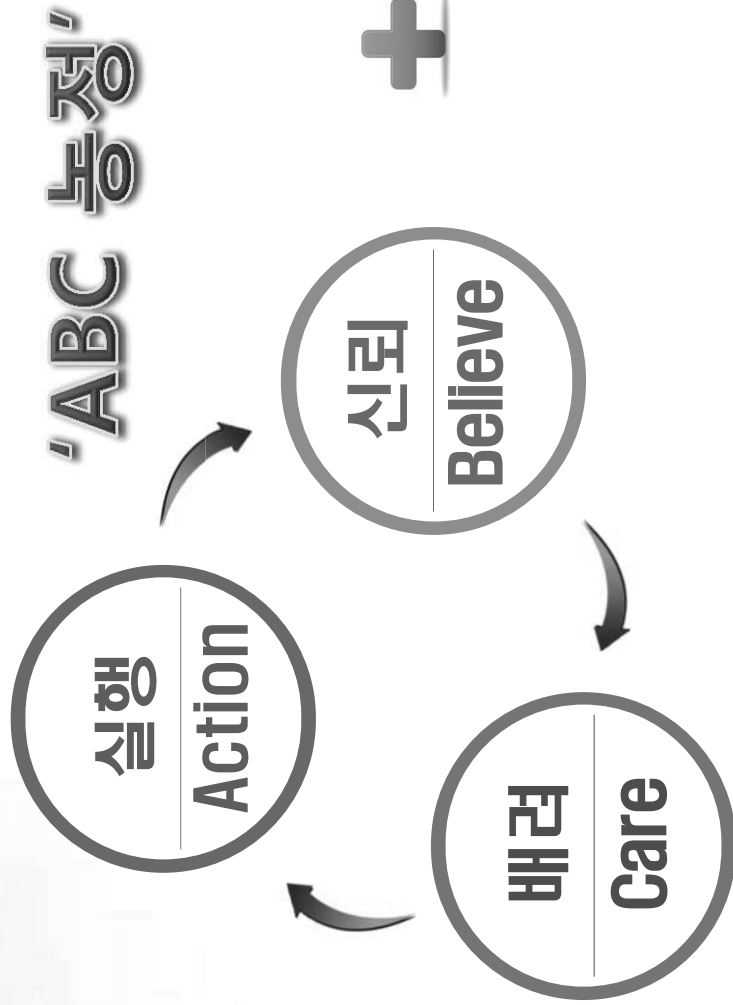
❖ 전체경영체: 농업경영체 DB기준/ 전문농: 농업조수입 5천만원 이상(농업인 신고기준)

II

양성평등
노임이론

노동·여성 정책 방향

추진 목표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 증대, 농촌 복지 증진



협치농정 강화

- ❖ 농업인 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수평·수직적 소통과 교류 확산

- ❖ 정책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여건 변화를 고려한 예측 가능한 농정 추진

➔ 농업인, 유관기관, 국민의 신뢰 회복

2. 중점 추진과제

▶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성장동력 확충

- 논·밭 주산지 중심 조직화·규모화, 스마트팜 확산 및 6차산업 내실화 추진
- 수출확대 & 수출증대 효과가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선순환시스템 구축

▶ 농업인 소득 증진 및 복지 확충

-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보완 및 투입재 비용절감 등 지속 추진, 재해보험 등 농가경영 안전망 강화, 고령농 복지제도 확충 등

▶ 농축산물 유통개선 및 수급안정

- 온라인 및 로컬푸드 직매장 등 지속 확충, 친환경 및 안전농축산물 생산·유통 확대, 수급·유통정보 적기 제공 및 수급불안 선제 대응

▶ 농촌 활력 창출 및 농촌 공간의 가치 제고

- 농식품 분야 청년 창업 지원, 농업교육 내실화 및 현장기술 강화 등 농촌의 활력을 창출할 핵심인력 육성
- 지역산업 및 정주여건 개선, 자연환경과 음식·주거 등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치유·휴양 등 농촌가치 확산

III

양평인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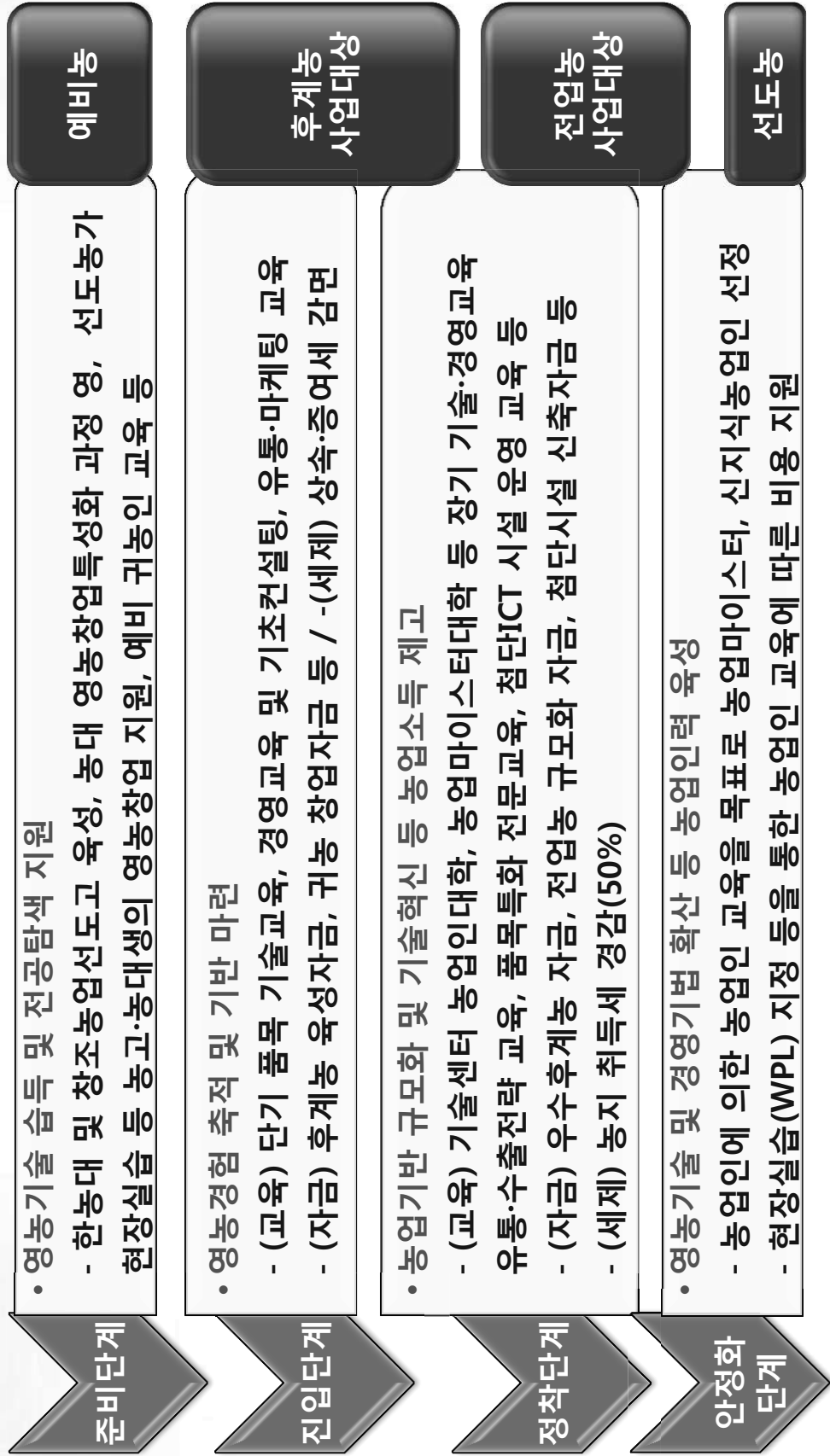
농업인력 육성 정책

1. 농업인력 육성 체계

III

농업인력 육성 주요 정책

❖ 농업인력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 및 교육지원 체계 구축



2.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농고 · 농대 학교 지원

● 졸업 후 농산업분야 진출을 유도하고 교육생 실무 역량향상을 목표로 농업계 학교 지원

● 현장실습 중심의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교육생 역량향상을 지속적으로 향상

* ('13) 16.8% → ('14) 18.0 → ('15) 22.6

교육개요

◆ (운영대상) 농업계 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 대학교
* '16년 운영현황 : 23개교(농고 13개, 농대 10개)

◆ (교육대상) 농고 · 농대 재학생

◆ (지원조건) 국고 100%

◆ (교육과정) 교내 · 외 현장실습, 취 · 창업 동아리 활동, 농산업분야 자격증 취득, 승계농/후계농양성 인턴십/산업체 연계 교육, 선도농업인 교류 등

창 · 취업 역량강화

● 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관심을 유도하고, 취 · 창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 다양한 진로탐색을 위한 농산업 취 · 창업 캠프

◆ 선도농업인이 멘토가 되어 자신의 생산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선도농 코칭 프로그램 운영

◆ 학교에서 배운 이론 · 지식 · 기술을 실제 영농현장에 적용해보고 문제점을 파악,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장기현장실습교육(1개월 이상) 운영

◆ 농업관련 전공분야별 경진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창업 및 농산업분야 진출을 위한 긍정적 마인드 향상을 위해 FFK 전진대회 운영

◆ 농업선진국의 생산기술 및 경영노하우를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국외연수 과정 운영

2. 미래세대 농업인 육성

❖ 미래세대 청년 창업농 양성을 위해 농고 · 농대에 직업교육과정 도입 및 한국농수산대학 입학정원 확대

창조농업선도고교

- 학교를 원예, 축산학과로 개편하고, 교원 전문성을 강화하여 실제 영농 정착 후계인력 양성
- 영농의지 · 기반이 있는 학생 중심으로 선발, NCS 기반의 직업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
- ◆ 실습학년제, 해외 전문기관 연수 등 영농창업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 실시

교육개요

- ◆ (운영대상) 홍천농고, 보은자영고, 호남원예고
- ◆ (지원예산) 16년 20억원/학교당

영농창업특성화대학

- 농대에 원예, 축산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단을 구성, 영농 정착 후계인력 양성
- 영농의지 위주로 학생을 선발, 영농 창업에 필요한 전문기술, 경영능력을 습득할 수 있는 교과목 운영 (전체 졸업학점의 30~40%)
- ◆ 실습학기제, 교외 현장체험프로그램, 해외 전문기관 연수 등 창업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실시

교육개요

- ◆ (운영대상) 연암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 ◆ (지원예산) 16년 2억원/학교당

한국농수산대학

- 기술력과 창의력을 갖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영농의무가 있는 한농대 입학정원 확대 추진
- ◆ 현재 390명인 입학정원을 '18년 까지 550명으로 확대('17년부터 2년에 걸쳐 각각 80명씩 총 160명 증원)

❖ 창업자금 지원 및 교육 등을 통해 핵심 정예인력으로 양성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 농촌 인구감소,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력양성
- 창업기반 조성 자금지원 및 교육컨설팅 지원을 통해 젊고 우수한 후계농업인력 확보
 - 후계농 : ('14) 1,861명/ ('15) 1,886/ ('16) 1,807
 - 우수후계농 : ('14) 301명/ ('15) 307/ ('16) 304

사업개요

- ◆ (지원대상) 만 18세이상 ~ 50세 미만이며 영농종사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귀농인도 신청 가능)
 - * 우수후계농 지원자격 : 후계농 선정 후 5년이상 영농 종사자
- ◆ (지원내용) 경종 및 축산분야에 농지구입 · 시설설치 등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융자), 교육 · 컨설팅 지원
 - * (후계농)연리 2%, 최대 2억원 대출가능, 3년거치 7년 분할 상환
 - * (우수후계농)연리 1%, 최대 2억원 대출가능,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 (교육과정) 경영교육, 멘토링, 경영심화, 국외연수 등 현장중심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연평균 1,800명 규모)

❖ 도시 청년층의 농촌 유입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정책 추진

귀농·귀촌활성화 사업

- 농업·농촌의 인력부족 해소 및 새로운 활력 창출을 위해 농촌에 기반이 없는 도시의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주택자금 및 창업자금 지원
 - 귀농가구 : '13) 10,202가구 → '14) 10,758 → '15) 11,959
 - 귀농자금 지원액(용자 기준) : '13) 600억원 → '14) 700 → '15) 1,000 / 1천여명 지원

사업개요

- ◆ (지원대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이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농촌에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65세 이하인 자. 단, 농촌 이주 후 5년 경과자는 제외
- ◆ (자금지원) 경종 및 축산분야에 농지구입·시설설치 등 창업기반 조성을 위한 자금과 주택 구입·신축자금
 - * (창업자금) 연리 2%, 최대 3억원 대출가능,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단, 타 정책자금을 기 대출 받은 경우 차감
 - * (주택자금) 연리 2%, 최대 5천만원 대출가능,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 (실습지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 귀농인의 집, 선도농가 실습지원(농진청) 등 추진

4. 전문농업경영인 역량 강화 지원

❖ 현장·정책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을 운영, 전문농업인 양성

농업·농촌교육 공모사업

- 농업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현장수요와 농정목표에 부합하는 우수교육과정 공모·운영
- 현장 성과창출이 가능한 장기·심화과정(40시간 이상) 확대로 현업적용도 및 교육만족도 지속 향상
 - 현업적용도 : ('14) 4.17 → ('15) 4.24
 - 만족도 : ('14) 4.42 → ('15) 4.55

교육개요

- ◆ (운영대상)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공모
* '16년 운영현황 : 38개 과정(일반공모 32개, 기획공모 6개)
- ◆ (교육대상) 농업인, 농촌마을 리더 및 주민, 귀농·귀촌인, 농산업 관련 법인 관계자 등
- ◆ (지원조건) 국고 70%, 자부담 30%
- ◆ (교육분야) 창업·경영, 6차산업, 농촌개발·거버넌스, 농축산 생산기술 4개 분야

농업인 국외훈련

- 국외 선진지 사례학습 및 현장실습, 벤치마킹을 통해 FTA 등 국제 농업환경 대응력 및 농업경쟁력 강화
- 사전워크숍, 현장연수, 사후워크숍의 체계적 단계별 추진을 하여 현업적용도 및 만족도의 지속 향상
 - 현업적용도 : ('14) 4.17 → ('15) 4.24
 - 만족도 : ('14) 4.42 → ('15) 4.55

교육개요

- ◆ (운영대상) 현장수요를 반영하여 매년 공모
* '16년 운영현황 : 7개 과정(일본 2, 뉴질랜드 1, 유럽 4)
- ◆ (연수대상) 과정별로 선발을 거쳐 선정된 전문농업인
- ◆ (연수인원) 과정당 20명
- ◆ (지원조건) 국고 50%, 자부담 50%

4. 전문농업경영인 역량 강화 지원

◆ 현장실습 중심의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역량 향상 교육 지원

농업마이스터대학

-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실습형 현장중심 기술경영교육 운영

— 교육수로 : ('09 ~ '16) 6,311명

* 정규대학이 아닌 2년제 평생학습과정

- 현장 적용이 가능한 장기 심화교육을 통해 수료생 역량향상에 기여

— 교육 전후 역량향상률 : ('14) 14.5 → ('15) 21.0

교육개요

- ◆ (대학구성) 9개도, 99개 전공, 2,219명(전공별 20명)
- ◆ (교육과정) 품목전공별 2년 4학기(32학점, 480시간)
- ◆ (교육대상) 영농경력 13년 이상의 중상급 이상의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
- ◆ (지원조건)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 1인당 연 100만원 수준
- ◆ (수료시 혜택) 졸업증 수여, 자금지원 우선순위 등

현장실습교육(WPL)

- 선진농업국 수준의 생산성 증대를 목표로, 실습장(전국대표, 지역품목) 지정 및 실습교육운영('09~)

* (전국대표) 연중 전국적인 교육수요를 충족, 규모화된 실습장

* (지역품목) 지역적 교육수요를 충족, 법인 이하 규모의 실습장

- 현장실습교육을 통해 수료생 현업적용도의 지속적인 향상

* ('13년) 3.87점 → ('14) 4.36 → ('15) 4.35

교육개요

- ◆ (운영대상) 현장실습교육장 총 114개소
- * 전국대표 13, 지역품목 101
- ◆ (교육대상) 농업인, 귀농(예정)인, 농고·농대생
- * 지원조건 : (농업인, 귀농인) 국고 70%, (농고·농대생) 국고 100%
- ◆ (교육내용) 실습장별 선도농업인의 특화된 핵심기술 및 노하우 전수
- ◆ (운영방식) 과정당 15시간 이상(실습비중 60% 이상) 20명 이내로 운영

4. 전문농업경영인 역량 강화 지원

◆ 선진국 수준의 ICT 교육 강화 및 전문농업인 양성 제도 운영

첨단품목특화 전문교육(품목대학)

- ICT 활용역량 강화를 통한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품목대학 확대 · 운영
* ('15년, 1개) 토마토 → ('16, 4) 토마토+딸기, 양토, 버섯
* 지원조건 : 국고 80%, 자부담 20%

● '15년 운영한 토마토대학 성과분석 결과

- 연간 소득차이 35.7% ↑, 연간 생산성 차이 15.1% ↑
* 15년 토마토대학 교육생(60명)과 비교육생(122명) 비교

● '17년 품목대학 확대 계획(7개 품목)

교육특징

- ① ICT 첨단기술 활용, 핵심영농기술 및 노하우 습득교육
- ② 문제해결형 컨설팅 방식의 현장실습교육
- ③ SNS를 활용, 핵심기술 및 노하우 공유·확산
- ④ 수료생 중 우수 교육생 선발, 국외연수 실시

농업마이스터 지정 및 활용

- 최고의 전문기술과 경영역량의 농업마이스터 지정
 - 필기시험, 역량평가, 현장심사 등 3단계의 심사를 거쳐 전문농업경영인 지정
 - 지정 · 확대 : ('13) 102명 → ('15) 147, 45 ↑
- 농업마이스터를 활용한 후발농업인 교육 확대
 - 농업마이스터 보유자의 숙련된 고급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품목기술 교육과 컨설팅 추진
 - 활용교육 : ('14) 879명 → ('15) 954, 8.53% ↑

교육개요

- ◆ (목적) 농업마이스터 지정자를 활용하여, 실습교육 중심 기술교육 등 핵심 노하우 전수
- * '16년 운영현황 : 6개 과정(품목교육 2, 멘토링 1, 현장컨설팅 3)
- ◆ (교육대상) 농고 · 농대생, 귀농인, 후발 농업인 등
- ◆ (교육인원) 총 1,000명

감사합니다

메 모 장

메 모 장

메 모 장

메 모 장